

與 “전대, 내달 25일 개최”... 지도체제·당대표 경선 룰 논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 11명 당헌·당규특위 총 7명으로 구성 지도체제 이견, 한동훈 견제 영향 전대 기간 촉박... 현행 유지 가다 당대표 경선 룰 변경될 것으로 보여 당내 의견 수렴절차 밝기로 결정



여상규 국민의힘 당헌당규개정특위 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헌당규개정특위 1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시스

국민의힘이 4일 전당대회 준비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전날(3일)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를 출범하고, 1차 회의를 열어 전당대회 개최 시기를 7월 25일로 정했다. 그리고 이날 당헌·당규 개정 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당대회 룰(규칙) 변경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날 당 대표 선출 일정과 관련해 “잠정적으로 7월 25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같은날 황우여 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전당대회를 가급적 올림픽 경기 시작 전에 마쳐볼까 한다”고 말했다. 2024 파리 올림픽은 내달 26일 개막해 8월11일 폐

막한다. 총 11명으로 구성된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전당대회를 준비할 예정이다. 당헌·당규 특위는 총 7명으로, 전당대회 룰 변경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우선 전당대회 날짜는 잠정적으로 내달 25일로 정해졌다. 그러나 지도체제

와 당대표 경선 룰 등을 두고 이견이 발생할 경우 시기 말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도체제의 경우 당대표와 최고위원 경선을 따로 진행하는 현행 단일지도체제와 당대표와 최고위원 경선을 동시에 진행해 득표순으로 대표를 정하는 집단지도체제를 두고 의견이 나뉜다. 단일지도체제 하에서는 수직적인 당정관계

가 발생할 경우, 다른 지도부 구성원이 손을 쓸 수 없다는 지적이 있어서다. 또, 앞서 황우여 위원장은 ‘절충형 지도체제’를 언급한 바 있다. 통합 경선을 진행해 최다 득표자가 당대표를 맡고, 2·3위가 최고위원으로 지도부에 합류하는 방식이다. 지도체제를 두고 이견이 발생한 것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때문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수직적 당정관계를 불식시키기 위해 집단지도체제가 거론된 것이 아니라, 한 전 위원장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는 시각도 있다. 또 단일지도체제로 전당대회를 치를 경우 ‘한동훈 대세론’에 전당대회가 흥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지도부는 전당대회일은 기간이 촉박해 지도체제에 관해서는 더 논의하지 않고, 현행 유지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전날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성일종 사무총장이 이런 내용을 의원들에게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도체제 전환 문제에 대한 논의가 끝난 것은 아니다.

여상규 당헌·당규특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전날 의원총회에서 (단일지도체제로) 결론낸 것은 아니라고 들었다”며 “의원총회와 상관없이 (집단 지도체제 도입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당대표 경선 룰은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당 일각에서는 총선 참패 이후 현행 ‘당원투표 100%’ 규정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현행 규정은 지난해 3·8 전당대회에서 친윤(친윤석열)계에 유리하도록 만든 경선 룰로, 이로 인해 ‘김기현 지도부’가 탄생한 바 있다. 이에 수도권 의원과 낙선자들은 당대표 경선에서 민심(일반국민 여론조사)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당내 주류인 영남권 의원과 친윤계에서는 룰 개정에 회의적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당대표 경선 규정을 위한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밝기로 결정했다. 사실상 현행 룰을 폐기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野 “종부세 공식논의 안 해... 내달 결론낼 것” 접경지역 훈련 재개·대북 확성기 사용 가능

국민 실생활 등에 큰 영향 미쳐 ‘신중’ 내달 정부 세법 개정안 제출 시기 맞춰 어떤 입장 취할 것인지 의논·결론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4일 종합부동산세 폐지 논의와 관련해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정부의 구체적 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7월쯤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 실생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부동산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 만큼 종부세는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졸속으로 검토하지 않고 개인의 소신에 입각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은 오는 7월쯤으로 예상

되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 제출 시기에 맞춰 당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7월쯤이면 정부가 방침, 방안들을 낼 것이고 그에 대한 민주당 (입장)이 있어야 할 것이니 그즈음 민주당도 정부의 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의논하고 결론을 내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며 “세법 개정 예산안 제출 일정에 맞춰 당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예진 기자

>> 1면 ‘9·19 군사합의...’서 계속 군은 이미 강원도나 경기도 등 접경 지역에서 훈련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의 동향을 주시하며 검토할 전망이다. 북한도 지난해 11월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 선언을 한 바 있으므로, 우리 정부도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간 셈이다. 앞서 정부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오물 풍선’ 살포, 위성항법장치(G

PS) 교란 등 각종 도발행위를 지속하자 지난 2일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확대회의를 열고 ‘북한이 감내할 수 없는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같은날 저녁 오물 풍선 살포 중단 입장을 밝혔지만,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통해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서예진 기자